

계엄군 5만7735발 실탄 휴대...비상 입법기구 창설 정황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으로 본 사전모의

‘윤석열’ 88차례·‘대통령’ 152차례 등장...윤 내란수괴로 지목
반국가 세력 활개·부정선거 의혹 집착...지난해 3월부터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모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5일 확보한 김 전 장관의 8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88차례, ‘대통령’이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내란 수괴) 혐의를 두고 작성한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계엄 지휘권 등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롭게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됐다.

◇비상계엄 왜= 공소장에는 국민이 금급해하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상 없이 압수해 부정 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 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 검

찰 조사결과다.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일을 잘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계엄군 실탄 무장=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이 모두 5만7735발의 실탄을 휴대하고 작전에 나섰다. “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다른 조사결과다.

당일 경찰 3144명과 군 1605명, 총 4749명이 동원됐다.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으로 알려졌다.

광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50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과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싣었다.

헬기 12대에 나눠 타고 국회로 진입한 707특수 임무단은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과 권총용 9mm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이 출동했다. 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했다.

◇국회무력화, 비상 입법기구 창설 기도=국회에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넸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



광주시민들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9차 광주시민총회대회에 참여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헌법상의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적었다.

◇국무위원 반대에도 계엄 강행=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했고 (비상계엄)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일방통보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 전군 지휘권 행사=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

벌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육군참모총장 박인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발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호처 관계자 내란 공범으로 즉각 구속하라”

오월단체·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가두행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광주지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은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고, 오월단체와 광주·전남 시민사회 단체는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를 내란 공범으로 즉각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에서 제9차 광주시민총회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총 1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비상행동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공식 집회는 열지 않고 도심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월단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집행을 군사작전처럼 방해한 윤석열 내란수괴와 이를 동조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윤석열 내란수괴는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이 같은 불법적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더욱 강력하고 단호

하게 법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따른 공직자는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해결해야 할 국가 공권력이 내란 수괴의 사병 집단인 경호처에 조종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평범한 국민을 향해서는 그렇게 단호한 국가 공권력이 내란법과 사병들 앞에서 보인 무기력은 실망 그 자체”라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과 하수인들을 내란동조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즉각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즉각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직무정지 대통령에 멈춘 법 집행

▶1면에서 계속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집입”이라며 책임을 물었다고 공세에 나섰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막아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수처는 또 지난 4일 오후 5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지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행이 불발되자 박 처장과 김성훈 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처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끄고리 무시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합병공고

(채권자의 의 및 주권재민 공고)

주식회사 세연이앤에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이와이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5년 01월 03일 개최한 각각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을"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6일

"갑" 주식회사 세연이앤에스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672번길 18-17(자야동)
대표이사 김강

"을" 주식회사 케이이와이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사창동길 87
대표이사 이은영

주식회사 세연이앤에스

합병공고

(채권자의 의 및 주권재민 공고)

주식회사 세연이앤에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이와이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5년 01월 03일 개최한 각각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을"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6일

"갑" 주식회사 세연이앤에스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672번길 18-17(자야동)
대표이사 김강

"을" 주식회사 케이이와이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사창동길 87
대표이사 이은영

주식회사 케이이와이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